

민주시민교육과 투표참여: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엄 기 홍 (Eom, Ki-hong) \*

(E-mail : [kheom@knu.ac.kr](mailto:kheom@knu.ac.kr))

논문접수일 : 2012년 3월 5일

논문심사일 : 2012년 4월 20일

게재확정일 : 2012년 5월 20일

\* 학위취득대학: 켄터키주립대학  
현직: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민주시민교육과 투표참여: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 <국문요약> —

본 연구는 민주시민교육의 의도된 효과가 현실화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민주시민교육의 함의인 선거관심도, 선거지식, 그리고 정책적 차별성이 정치 효능감과 투표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 이러한 영향력이 민주시민교육의 궁극적 목적인 투표참여에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17대 대통령 선거를 분석한 결과, 기존 연구결과와는 다르게 민주시민교육은 전체적으로 의도한 효과를 거두고 있었다. 그렇지만 민주시민교육의 효과는 세부 내용에 따라 차별적인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예를 들어, 민주시민교육의 함의인 선거관심도와 주관적 정책차별성은 투표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선거지식은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정치 효능감과 투표 효능감에 대한 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민주시민교육이 투표참여로서 대표되는 정치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지만, 그 효과는 교육의 내용에 따라 차별적일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주 제 어 ] 민주시민교육, 정치 효능감, 투표 효능감, 투표참여

I. 문제제기

한국의 민주주의는 간접민주주의의 한 형태인 대의민주주의를 채택

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의 운영은 선거에 대한 관심, 선거제도에 대한 지식, 후보자 및 정당이 제시한 정책에 대한 차별적 인지 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소양을 가진 유권자가 투표참여 등과 같은 형태로 정치에 참여할 때, 대의민주주의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대의민주주의의 궁극적 주권자인 유권자가 선거에 대하여 관심이 없거나, 적절한 지식을 갖추고 있지 못하거나, 후보자 또는 정당 간의 정책적 차별성을 구분할 수 없을 때 대의민주주의는 근저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한다. 물론 이의 결과 야기될 수 있는 현상 중 하나인 저조한 투표참여율은 선출된 대표자의 정통성 부족과 이에 따른 정책집행의 어려움을 발생 시키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듯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 한국의 대의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최장집 2002).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참여율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최근 치러진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의 투표참여율은 과반수를 다소 상회하는 63%이었으며, 2008년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참여율은 46.1%에 그치고 있었다. 2010년 지방선거 때 광역단체장의 투표참여율도 과반을 간신히 넘는 54.5%에 그치고 있었다. 물론 지나친 투표참여율이 정치체제의 문제점을 반영할 수도 있다는 지적 그리고 현재의 투표참여율이 평균으로 회귀라는 지적 등이 있지만(조진만 2010), 대의민주주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유권자의 투표참여가 중요한 전제사항이다.

한국 대의민주주의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관심, 정책적 차별성, 정치적 효능감 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데 있다. 1992년과 1997년 대통령 선거에 비해, 2007년 대통령 선거 때 “정치나 선거에 관심이 없어서”라는 이유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비중이 약 두 배 증가하였다. 또한 “누가 당선되어도 마찬가지여서”라는 항목에서도 1992년과 1997년에 비해 약 두 배 정도의 응답비중이 상승했으며, 투표 효능감을 묻는 “누구를 찍어도 선거결과에 영향이 없어서”라는 항목에서도 같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다(김형준 2008). 이와 같은 추세는 대

의민주주의의 전제사항, 선거관심, 선거지식 그리고 정책에 대한 차별적 인지 등에 대한 심각한 논의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현상은 한국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고, 미국을 비롯한 독일 등에서도 유사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다 (Abramson and Aldrich et. al. 2007).

이에 조용하여, 대의민주주의 위기를 겪는 여러 국가들은 대의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정통성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가운데 민주시민교육은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효과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사회를 위한 시민양성이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이규영 2005; 최종덕 2007). 물론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그리고 운영주체에 따라서 내용과 그 효과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민주시민교육이 이와 같이 대의민주주의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한국의 대의민주주의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로서 민주시민교육의 가능성을 검증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민주시민교육의 함의로서 간주되는 선거관심도, 선거지식, 그리고 정책차별성이 정치 효능감과 투표 효능감에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후 이들 민주시민교육의 함의들이 교육의 궁극적 목적인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시도는 한국의 대의민주주의가 겪고 있는 위기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민주시민교육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리라 본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는 유권자의 관심이 비교적 높은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 II. 민주시민교육과 투표참여

유권자의 투표참여에 대한 논의는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합리적 선택 이론의 차원에서, 그리고 동원이론의 차원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조성대 2009). 예를 들어,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볼 때, 연령, 교육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투표참여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왜냐하면 연령 또는 소득 수준의 높은 사람일수록 투표참여로 결과 되는 기대보상이 커지기 때문이다(Verba and Nie 1972). 교육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취득의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진다. 합리적 선택이론의 차원에서 볼 때, 유권자의 투표참여는 투표참여로 인한 이득과 이에 대한 비용의 계산에서 이득이 큰 경우에 발생한다. 이때의 이득에는 선호하는 정책의 실현 등이 포함되며, 비용에는 정보취득 비용, 투표 장소까지의 거리 등 물리적 비용을 포함한다. 동원이론 차원에서는 후보자 또는 정당의 동원노력이 클수록 유권자의 투표참여가 커진다. 특히, 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보다는 후보자에 의한 유권자의 직접적 접촉이 보다 큰 효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erber and Green 2000).<sup>1)</sup>

그렇지만 투표참여에 관한 제(諸) 이론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비판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집합자료를 보면 미국 유권자의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은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참여율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이는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제기된 주장과 반대되는 결과이다. 또한 합리적 선택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유권자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유권자의 투표참여가 보상(이득)과 비용에 의한 계산에 의한 것이라면, 유권자의 한 표가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투표참여로 인한 보상은 일반적으로 이에 드는 비용에 비해 작다(Morton 2006). 소위 “투표의 역설”(paradox of voting)로 칭해지는 이와 같은 논리는 합리적 선택이론의 설득력을 상실케 한다.<sup>2)</sup>

이러한 비판에 대한 기존 이론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 1) 후보자 및 정당의 동원능력이 부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출 경우 오히려 투표율을 감소킨다는 주장 또한 제기되고 있다(Ansolabehere and Iyengar 1995).
- 2) 물론 모두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권자 한 표의 가치가 상승되어 투표참여로 인한 보상이 커지게 된다(Ferejohn and Fiorina 1974). 이와 같은 “비투표의 역설”(paradox of not voting)은 투표의 역설성과 순환적 관계에 있다(Morton 2006).

사회경제적 조건이 호전됨에도 불구하고 투표참여율이 진작(振作)되지 않는 이유는 교육 및 소득의 증가가 투표 효능감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투표참여율 하락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Morton 2006). 즉, 교육수준이 증가하면서 정보취득 비용이 감소되고, 이에 따라 자신의 한 표가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작다는 것을 유권자가 보다 분명하게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수준의 상승에 따른 비용 절감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기대되는 보상이 작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교육과 밀접히 연관된 평균소득의 증가는 중간 소득계층의 증가를 가져옴으로써 투표참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즉, 투표참여에 대한 기대 보상이 큰 소득계층은 저소득계층과 고소득계층이다. 이들은 정권을 획득한 정당에 따라 자신의 사회복지, 또는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균 소득수준의 증가는 저소득계층 중 일부를 정책에 비교적 덜 민감한 중간 소득계층으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집합적 수준에서 투표참여율의 하락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끝으로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의 상승은 후보자/정당이 제공하는 유인책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유권자의 투표참여율이 더욱 낮추는 결과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투표의 역설”에 대하여 합리적 선택이론은 “투표참여로 인한 만족감”이라는 새로운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대응하고 있다(Riker and Ordeshook 1968; Ferejohn and Fiorina 1974; Morton 2006). 합리적 선택이론에 의하면 투표참여로 인한 비용이 이로 인한 이득 보다 일반적으로 크지만,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오는 만족감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이득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유권자는 투표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제시하는 투표참여로 인한 만족감은 민주시민으로서 의무를 이행했다는 만족감, 동료와의 동참으로부터 오는 만족감, 그리고 가장 후회할 일이 벌어질 가능성을 최소화했다는 데서 오는 만족감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이때 민주시민으로서 의무이행이란 민주시민으로서 규범적으로 이행해야 할 행위, 예를 들어 투표에 참여하여 자신의 정당선호도를 밝힘으로써 민주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대의민주주의 유지에 부응했다는 만족감

을 의미한다(Riker and Ordeshook 1968). 두 번째 만족감인 동료와의 동참에 따른 만족감은 동료로부터 오는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오는 만족감을 의미한다. 즉, 유권자는 동료들의 행위와 일치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동료와 “같이” 한다는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조, 이익단체 등과 같은 그룹차원의 동원은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었다(Morton 2006). 끝으로 유권자는 자신이 투표를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당선되지 않을 가능성을 막기 위하여 투표에 참여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Ferejohn and Fiorina 1974). 즉, 유권자는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이 가장 후회할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투표참여에 대한 제(諸) 이론들의 주장에 근거해 볼 때, 향후의 투표참여율이 제고(提高)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왜냐하면 교육과 소득 수준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이며, 이의 부차적 효과로서 후보자 및 정당의 동원능력은 점차 쇠퇴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당이 선거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Bibby 1996), 후보자 또한 유권자와의 직접적인 접촉 보다는 미디어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Gerber and Green 2000). 또한 합리적 선택이론이 새로이 추가한 만족감도 가까운 시일 내에 상승될 가능성이 없다. 즉, 퍼트남(Putnam 2000)이 지적한 바와 같이, 기존의 지역공동체가 해체되고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s)이 감소함에 따라 민주시민으로서의 의무 이행에 대한 만족감, 동참함으로써 오는 만족감 등은 보다 작아질 것이고, 이러한 가능성은 한국 사회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부정적 전망은 한국의 경우 보다 심각한 것으로 보여진다(조진만 2010). 예를 들어, 민주화 이후 한국의 선거는 극명한 대립구도였던 민주 대 반민주 구도가 사라진 반면, 이에 대응할만한 대립구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2004년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금권선거, 조직선거를 상당부분 제한함으로써, 모순적이게도 이로 인한 금권이나 조직에 의한 동원 효과도 기대하기 힘들게 되었다. 그리고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한 온라인상의 대안적 정치참여 수단의 발달은 의견표명의 창구로서 선거의 효용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또한 민주화 이후 구성된 정부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돌아옴으로써 누가 정권을 차지하던 마찬가지로 정치 효능감 상실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에 반응하여, 학계를 비롯한 정계는 투표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비용감소 차원에서 투표소 확대, 투표일의 공휴일 제정, 의무투표제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이득 증가 차원에서 투표참여에 따른 투표용지 복권제, 상품권 지급,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 등 다양한 방안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주시민교육은 투표참여로 인한 만족감의 증대, 보다 구체적으로 민주시민의 의무 이행에 대한 만족도를 증가시킴으로써 투표참여를 제고(提高)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제기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교양 있는 시민을 육성하는데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최종덕 2007). 이를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적을 지니고 있다(이규영 2005). 첫째,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시민의 지식을 형성하는 데 교육의 목적이 있다. 둘째, 정치과정에 대한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선거 및 정치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는데 목적이 있다. 셋째, 대의민주주의의 궁극적 주권자로서 발생하는 정치현상에 대한 올바른 판단능력을 배양하고, 이에 따른 참여를 독려하는데 목적을 지니고 있다. 즉, 민주시민교육은 국민 스스로가 국가의 주체가 되어 정치 및 선거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지식을 습득하여 선거 및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독일의 경우 연방정치교육원을 비롯한 학교, 이익단체, 정당 등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이규영 2005), 미국의 경우도 학교와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의 의도가 투표참여를 비롯한 정치참여 영역에 실현될 수 있을까? 2008년 국회의원 선거를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조진만 2010), 민주시민교육은 대체적으로 투표참여에 유효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었다. 즉,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동의,

한국 민주주의 현실평가, 정당친밀감, 정보 취득의지, 정치지식, 그리고 정치 효능감 중 투표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은 정당친밀감과 정치 효능감에 불과하였다. 또한 같은 선거를 대상으로 다른 형태의 정치참여인 선거운동 참여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조진만·최준영 2009). 즉, ‘특정 후보자 또는 정당에 대한 투표권유’라는 선거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정당친밀감과 정치 효능감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볼 때, 민주시민교육이 한국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시행될지라도 의도한 민주시민의식 함양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일련의 기존연구들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선거의 중요성은 선거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민주시민교육의 효과를 차별적으로 만들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유권자가 인지하는 선거의 중요성은 대통령 선거가 가장 높으며, 국회의원 선거, 광역단체장 선거 등이 뒤를 잇고 있다. 따라서 선거의 중요성이 중간수준인 국회의원 선거를 대상으로 한 분석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보수적 검증이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이들의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조작화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동의” 변수는 “민주주의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어떤 정부형태보다도 낫다”는 질문지에 근거하여 조작화했으며, “한국 민주주의 현실평가” 변수는 한국의 민주정치에 대한 만족도 질문, 개인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질문, 그리고 한국의 선거가 유권자의 의견을 잘 대변하고 있는 지에 대한 질문들을 조합하여 조작화되었다(조진만 2010). 이러한 변수는 민주시민교육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해당하는 변수이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이 목적인 바를 달성했을 경우, 이러한 변수는 높은 수준의 합의를 보일 것이며, 이는 변수의 변량을 줄임으로써 변수의 변별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은 응답자의 응답이 한 쪽 방향으로 치우쳐 있다는 저자 본인의 지적에 의하여 보다 신빙성을 얻게 된다(조진만 2010, 96).

끝으로 이들의 연구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로 인하여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변수가 그렇지 않게 발견되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즉, 민주시민교육의 함의인 선거관심도 증대, 선거지식 함양, 정책에 대한 차별성 확보가 달성될 경우, 이는 정치 효능감 및 투표 효능감 증대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원인이 되는 변수와 이의 결과인 변수들을 투표참여모델에 같이 삽입할 경우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그렇지 않는 관계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선행하는 변수만을 삽입함으로써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King and Keohane et. al. 1994).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중요한 선거를 대상으로 경험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는 민주시민교육의 함의가 이의 궁극적 목적인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함으로써, 민주시민교육의 효과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유권자를 비교할 때, 선거관심도가 높은 유권자일수록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연구가설 2: 유권자를 비교할 때, 선거지식이 높은 유권자일수록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연구가설 3: 유권자를 비교할 때, 정책적 차별성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유권자일수록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 장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 가설들을 검증할 데이터와 변수들을 설명한 후, 이를 분석하기 위한 통계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I. 데이터와 통계적 모델

민주시민교육은 다양성(diversity)과 관용(tolerance)을 갖춘 민주시민을 양성하여,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투표참여 등 정치에 대한 참여

를 증진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선거와 관련하여 민주시민교육은 선거관심도 증가, 선거지식 증가, 그리고 후보자 및 정당 간의 정책적 차별성을 확보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은 유권자의 정치 효능감과 투표 효능감을 증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투표참여와 같은 정치참여의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데 이용될 데이터와 방법론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민주시민교육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17대 대통령 선거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분석대상으로서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아닌 대통령 선거를 선택한 이유는 선거의 중요성에 따라 유권자의 관심 정도 및 투표참여의 행태가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부캐넌과 툴록(Buchanan and Tullock 1962)이 지적한 바와 같이, 유권자는 정치적 비중이 큰 선거에서는 자신의 선호정당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기 어려운 대신, 정치적 비중이 작은 선거에서는 자신의 선호정당에 대한 불만을 비교적 쉽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비중이 큰 선거에 있어서는 불만 표시의 결과로 야기될 수 있는 비선호정당의 집권 가능성, 즉, 외부비용(external cost)이 유권자의 감내 수준 이상으로 증대되기 때문이다. 반면, 비중이 작은 선거, 예를 들어 재·보궐 선거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평소 지지정당에 대한 불만표시가 정세를 바꿀 정도로 파급효과가 크지 않다(진영재·조진만 2002; 조진만·최준영 외 2006). 이 때 나타나는 유권자의 불만표시는 선거에 대한 무관심 및 투표에 대한 '기권' 등으로 대표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 때에는 투표참여율이 상승하고, 대통령 선거가 없는 중간 선거 때에는 투표참여율이 하락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상승-하락(surge and decline) 이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조진만·최준영·가상준 2006; Campbell 1987, 1993; Born 1990; Cover 1985; Campbell 1960). 따라서 본 연구는 민주시민교육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대통령 선거를 채택하여 민주시민교육의 보수적 검증 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의뢰해 한국 사회과학데이터센터가 실시한 2007년 실시한 “제17대 대통령선거 관련

유권자 의식조사”를 사용한다.<sup>3)</sup> 이 조사는 선거 직후인 2007년 12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전국 15개 광역시도(제주도 제외)에서 실시되었다. 모집단은 전국(제주도 제외)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성인으로서 1,200명의 표본이 시도별 만 19세 이상 인구수를 고려한 다단계층화 무작위표본추출방법(Multi-stage Stratified Random Sampling)을 통하여 추출되었다.<sup>4)</sup> 신뢰수준은 95%이며, 표준오차는  $\pm 2.8\%$ 이다.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대인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가 실시 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한 독립변수는 민주시민교육의 함의로 간주되는 선거 관심도, 선거지식, 주관적 정책 차별성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민주시민 교육은 유권자의 선거관심도 증대, 선거지식의 심화, 정책 차별성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들을 민주시민교육의 함의로서 설정하였다. ‘선거관심도’ 변수는 “선생님께서 이번 대통령선거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습니까?”에 대한 질문에 대답으로서 “매우 많았다”라고 답한 경우 1로, “조금 있었다”라고 답한 경우 2로, “별로 없었다”라고 답한 경우 3으로, 그리고 “전혀 없었다”라고 답한 경우 4로 조작화되었다. ‘선거지식’ 변수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조합변수(composite variable)이다. 사용된 세 개의 질문은 대통령 당내후보경선제도 인지 정도, 예비후보제도 인지 정도, 메니페스토 운동에 대한 인지 정도이다. 사용된 변수의 함은 3(지식이 가장 높은 경우)에서 12(지식이 가장 낮은 경우)이지만,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3-5의 값을 0으로, 6-9의 값을 1으로 그리고 10-12의 값을 2로 재정의 하였다.<sup>5)</sup> 끝으로 ‘주관적 정책차별성’ 변수를

3)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에서 수행된 여론조사 자료는 다양한 학술적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본 논문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 조진만(2010), 조진만·최준영(2009)의 연구도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에서 수행된 여론조사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

4) 통계모델에 삽입된 변수들에 대한 무응답자 등을 제외하면, 분석에 사용된 최종 표본 크기는 1,086명이다.

5) 세 개 질문지의 단순 합을 분석에 사용할 경우 독립변수의 변량이 크기 때문에 통계적 분별력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될 수 있다. 그렇지만 단순 합으로 된 변수를 모델에 삽입하여 분석할 경우에 있어서나 재정의된 값을 사용한 분석에 있어서나 선

위해 사용한 질문은 “선생님께서 이번 선거에서 후보 간에 정책적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로서 이는 응답자가 실질적으로 차이를 구분하는지를 측정하기 보다는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차이를 묻는 질문이다. “매우 차이가 있었다”라고 답한 경우 1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다”라고 답한 경우 2로, “별로 차이가 없었다”라고 답변한 경우 3으로, 그리고 “전혀 차이가 없었다”라고 답한 경우 4로 조작화되었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대통령 선거 투표 참여여부이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0으로, 투표에 참여한 경우 1로 조작화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거관심도, 선거지식 및 주관적 정책차별성 모두 값이 커질수록, 투표참여 확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통제변수는 거주지역의 특성, 정당선호도, 인구사회학적 변수, 선거평가이다. 김재한(2011)은 지방선거에서는 지속적으로,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는 최근 들어 도저촌고 현상이 다시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수용하여, 거주지역의 특성이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제하고자 한다. 거주지역의 특성은 ‘대도시’ 변수, ‘중소도시’ 변수, 그리고 ‘읍면지역’ 변수로 측정되었다. ‘대도시’ 변수의 경우 응답자가 대도시에 거주할 경우 1로, 그렇지 않을 경우 0으로 조작화하였으며, 나머지 변수도 같은 방식으로 조작화되었다.

유권자의 정당선호도 여부는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적인 변수로서 보고되고 있다(조진만 2010; 조진만·최준영 2009; Abramson and Aldrich et. al. 2007). 유권자의 속성이 진성 유권자(sincere voter)이든 전략적 유권자(strategic voter)이든, 6) 선호하는 정당이 있을 경우 선호하는 정당의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또는 가장 싫어하는 정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편 교육, 소득, 연령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수도 투표참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거지식에 대한 중요성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재정 의된 값을 사용하고자 한다.

6) 진성 유권자와 전략적 유권자에 대해서는 엄기홍(2009)를 참조

미치는 변수로서 언급되고 있다(Abramson and Aldrich et. al. ibid.). 전술한 바와 같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와 같은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교육’ 변수, ‘소득’ 변수, 그리고 ‘연령’ 변수를 모델에 삽입하였다. 끝으로 ‘선거평가’ 변수는 부정적 선거 분위기가 대한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모델에 삽입되었다.

앤솔라베히어와 아이언거(Ansolabehere and Iyengar 1995)가 지적한 바와 같이, 부정적인 선거광고는 유권자의 정치적 불신과 냉소주의를 증가시킴으로써 투표참여에 부정적인 역할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공식 1)과 같은 통계모델로 재정리될 수 있다.

$$\text{투표참여}_i = \text{절편} + b_1\text{선거관심도}_i + b_2\text{선거지식}_i + b_3\text{주관적 정책차별성}_i + \mathbf{Xb} + e_i \text{ 공식 1)}$$

본 연구의 주요 종속변수는 투표참여이며, 주요 독립변수는 선거관심도, 선거지식, 주관적 정책차별성이다. ‘X’는 통제변수들에 대한 벡터이며, b는 각 변수에 대한 기울기 계수이다. ‘i’는 분석수준인 유권자를 의미하며, e는 교란요인(disturbance term)이다. 종속변수가 0과 1 값을 갖는 가변수이기 때문에 분석에 사용되는 모델은 로짓(Logit model)을 사용하고자 한다.

#### IV. 분석 및 발견

민주시민교육의 효과를 파악하기 전에 한국 유권자의 선거관심도, 선거지식, 주관적 정책차별성 수준을 먼저 살펴보자. 이러한 시도는 한국 유권자의 전체적인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들 세 개 변수 간에 존재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표 11> 유권자의 선거관심도, 선거지식 그리고 주관적 정책차별성  
(단위: 빈도수, %)

선거관심도	
매우 많았다	347(31.95)
조금 있었다	506(46.95)
별로 없었다	183(16.85)
전혀 없었다	50(4.60)
선거지식	
상	117(10.77)
중	740(68.14)
하	229(21.09)
주관적 정책 차별성	
매우 차이가 있었다	159(14.64)
어느정도 차이가 있었다	544(50.09)
별로 차이가 없었다	338(31.12)
전혀 차이가 없었다	45(4.14)

일반적으로 한국 유권자의 선거관심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 사용된 1,086명 표본 중에 약 31.95%에 해당하는 347명이 선거에 매우 관심이 많았다고 응답했다. 그렇지만 선거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는 10.77%의 응답자가 해당 사항을 알고 있는 것으로 응답한 반면, 후보자 간의 정책적 차이를 묻는 질문에는 14.64%의 응답자가 “매우 차이가 있었다”고 답변하였다. 이를 다른 측면에서 보면, 선거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자의 비중이 4.60%이고 후보자 간의 차이가 전혀 없었다고 응답한 비중이 4.14%인 반면, 선거제도를 잘 인지하지 못한 응

답자는 21.09%에 달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이, 이들 간의 상관관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선거관심도, 선거지식, 주관적 정책차별성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있지만,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지수인 감마계수(gamma coefficient)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선거관심도와 선거지식 간의 감마계수는 0.37(표준오차 0.05)이었고, 선거지식과 주관적 정책 차별성 간의 감마계수는 0.30(표준오차 0.05)이었으며, 선거관심도와 주관적 정책차별성 간의 감마계수는 0.40(0.04)이었다. 이러한 계수의 크기는 이들 간의 관계가 존재하지만, 그 상관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을 이야기 해주고 있다. 이러한 발견은 이들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그리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야기 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민주시민교육의 함의인 선거관심도 증대, 선거지식 심화 그리고 주관적 정책 차별성은 각각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가? 아니면 일부 변수들만이 영향을 미치는 가? 이러한 질문은 민주시민교육이 궁극적으로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임과 동시에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질문에 대답은 <표 2>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표 2>에 사용된 통계모델과 변수에 대한 설명은 공식 1)에 제시되어 있다. 모델 1부터 모델 3은 선거관심도, 선거지식, 주관적 정책차별성 각각에 대한 투표참여 효과를 분석한 결과이고, 모델 4는 이들 3개의 변수들만을 모델에 삽입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끝으로 모델 5는 이들 3개 변수와 통제변수 모두를 삽입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민주시민교육의 함의가 이러한 통제변수의 영향을 넘어 독립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지 살펴보자.

<표 2> 민주시민교육의 투표참여 효과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선거관심도	-1.159***			-1.063** *	-0.989** *
	(0.102)			(0.106)	(0.111)
선거지식		-0.660***		-0.272*	-0.265
		(0.137)		(0.157)	(0.166)
주관적 정책차별성			-0.588***	-0.260**	-0.210*
			(0.102)	(0.115)	(0.119)
대도시					-0.219 (0.258)
중소도시					-0.126 (0.268)
정당선호도					0.540*** (0.174)
교육					0.043 (0.161)
소득					0.031 (0.036)
연령					0.025*** (0.007)
주관적 선거평가					0.247** (0.108)
절편	3.791***	2.081***	2.690***	4.509***	3.229***
	(0.247)	(0.183)	(0.259)	(0.351)	(0.771)
N	1086	1086	1086	1086	1086
Pseudo R2	0.1367	0.0212	0.0306	0.1453	0.1797

괄호 안은 표준오차. \* p < .10; \*\* p < .05; \*\*\* p < .01

<표 2>는 선거관심도, 선거지식 그리고 주관적 차별성은 각각의 변수만을 삽입한 모델에서(모델 1, 2, 3) 그리고 이들만을 삽입한 모델에서(모델 4)에서 모두 투표참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선거관심도가 낮은 유권자일수록, 선거지식이 낮은 유권자일수록 그리고 주관적 정책차별성을 낮게 느끼는 유권자일수록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에 대한 분석에서나(모델 1-1.159, 모델 2 -0.660, 모델 -0.588), 이들 세 변수만을 삽입한 분석에 있어서나(모델 4 -1.063, -0.272, -0.260)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민주시민교육의 함의와 투표참여 간의 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통제변수를 삽입한 모델 5에 있어서는 선거관심도와 주관적 정책 차별성만이 투표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선거지식은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유권자의 선거지식이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떤 변수에 의하여 상쇄되었을까?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 선거관심도, 선거지식 그리고 주관적 정책차별성은 그대로 유지한 채 모델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을 하나씩만 대입하여 그 이유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선거지식이 통계적 유의미성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는 정당 선호도 변수가 삽입되었을 때 한하여 발생하였다. 아마도 정당선호도가 있는 유권자는 그렇지 않은 유권자에 비하여 선거지식이 높을 가능성이 크며,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표 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령 또는 주관적 선거평가 각각과 이들 세 변수를 삽입한 분석에 있어서 선거지식은 통계적 유의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나타냈다. 7)

최종모델인 <표 2>의 모델 5에 제시된 분석결과는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민주시민교육의 함의 중 선거관

7) 분석결과는 요청에 의하여 제공 가능함.

심도와 후보자 간의 정책적 차별 증대는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선거지식 심화는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발견은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이 단순한 지식전달보다는 토론위주의 비판적 사고 함양에 초점을 두어야 함을 제시해주고 있다(최종덕 2007). 다른 측면에서 보면, 단순한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을 통해서도 민주시민교육이 그 의도된 바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질문은 민주시민교육의 함의가 정치 효능감과 투표 효능감이라는 경로를 통하여 투표참여로 이어지는 가이다. 즉, 민주시민교육의 함의가 정치 효능감과 투표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효능감이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가였다. 분석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의 종속변수는 정치 효능감과 투표 효능감이다. '정치 효능감' 변수는 "나 같은 사람에게는 투표만이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 지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항목으로 측정되었으며, '투표 효능감' 변수는 "투표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내가 투표하는가 안하는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는 항목에 의하여 측정되었다. 두 변수 모두 값이 증가할수록 관련 효능감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8) 따라서 본 연구는 민주시민교육의 함의인 선거관심도, 선거지식, 그리고 주관적 정책차별성이 감소할수록 이러한 효능감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종속변수가 순서변수이기 때문에 순서로짓모형(Ordinal Logit Model)을 사용하였다. 나머지 통제변수들에 대한 조작화는 <표 2>의 경우와 같다.

<표 3>은 <표 2> 분석결과에 신빙성을 더해 주고 있다. <표 2>의 모델 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표 3>에서도 선거관심도와 주관적 정책차별성은 정치 효능감과 투표 효능감과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임이 밝혀졌다(정치 효능감의 경우 0.270, 0.261; 투표 효능감의 경우 0.425, 0.151).

8) 투표 효능감 항목의 경우 원자료를 보면 값이 증가할수록 효능감이 증가하도록 질문되어 있다. 해석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항목에 '-1'을 곱하여 그 방향을 역으로 하였다.

<표3> 민주시민교육, 정치 효능감 그리고 투표 효능감

	정치 효능감	투표 효능감
선거관심도	0.270***	0.425***
	(0.077)	(0.076)
선거지식	0.126	0.154
	(0.109)	(0.109)
주관적 정책차별성	0.261***	0.151*
	(0.083)	(0.081)
대도시	0.035	0.147
	(0.171)	(0.171)
중소도시	0.150	0.500***
	(0.177)	(0.178)
정당선호도	-0.254*	-0.028
	(0.131)	(0.129)
교육	-0.051	-0.032
	(0.106)	(0.106)
소득	0.029	-0.002
	(0.024)	(0.024)
연령	-0.014***	-0.003
	(0.005)	(0.005)
주관적 선거평가	-0.377***	-0.072
	(0.076)	(0.074)
절편 1	-0.267	0.664
	(0.509)	(0.508)
절편 2	1.725	2.424
	(0.512)	(0.514)
절편 3	4.001	4.310
	(0.525)	(0.527)
N	1086	1086
Pseudo R2	0.0402	0.0275

괄호 안은 표준오차. \* p < .10; \*\* p < .05; \*\*\* p < .01

즉, 선거관심도 또는 주관적 정책 차별성이 높은 유권자일수록 정치 효능감 또는 투표 효능감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선거지식의 경우 <표 2>에서와 같이, 정치 효능감과 투표 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러한 결과는 민주시민교육 내용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왜냐하면 토론위주의 비판적 사고를 통한 선거관심도 제고(提高)가 투표참여 뿐만 아니라 정치 효능감과 투표 효능감도 높이기 때문이다.<sup>9)</sup>

본 연구의 마지막 연결고리는 정치 효능감과 투표 효능감이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것이다. 버바와 쉘로즈만(Verba and Schlozman et. al. 1995)등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정치 효능감이 높은 유권자일수록 또는 투표 효능감이 높은 유권자일수록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지의 여부가 민주시민교육과 투표참여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마지막 조각이 될 것이다.

<표 4>는 이러한 질문을 분석한 표이다. <표 4>의 종속변수는 투표참여 여부이고, 주요 독립변수는 정치 효능감과 투표 효능감이다. 나머지 통제변수는 <표 2>의 경우와 같다. 사용된 통계모델인 종속변수가 가변수임으로 <표 2>와 같이 로짓모델을 사용했다. 모델 1과 모델 2는 정치 효능감, 투표 효능감 각각만을 삽입하여 분석한 결과이고, 모델 3은 정치 효능감과 투표효능감 두 개의 변수만을 삽입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모델 4는 통제변수 모두를 효능감 변수와 같이 삽입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표 4>에 제시된 분석결과를 통하여 볼 때, 민주시민교육은 그 의도한 효과를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9) <표 3>의 통제변수에 대한 결과는 정치 효능감과 투표 효능감이 서로 다른 효능감일 가능성을 보여 있다. 왜냐하면 정치 효능감의 경우 <표 2>의 분석결과와 같이, 정당 선호도가 있는 사람, 연령이 높은 사람 그리고 선거환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보다 높은 정치 효능감을 보여주고 있었다. 반면 투표 효능감에 있어서는 정치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 모두가 통계적 유의미성을 상실한 반면, 정치 효능감에서는 유의미하지 않던 거주지역의 속성 일부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표 4> 정치 및 투표 효능감과 투표참여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정치 효능감	-0.432*** (0.089)		-0.480*** (0.094)	-0.358*** (0.100)
투표 효능감		-0.574*** (0.084)	-0.609*** (0.087)	-0.627*** (0.093)
대도시				-0.163 (0.248)
중소도시				-0.016 (0.256)
정당선호도				0.844*** (0.166)
교육				0.048 (0.154)
소득				0.060* (0.034)
연령				0.027*** (0.007)
주관적 선거평가				0.260** (0.105)
절편	2.333*** (0.230)	-0.308 (0.240)	0.734** (0.316)	-1.072 (0.710)
N	1086	1086	1086	1086
Pseudo R2	0.022	0.043	0.067	0.126

괄호 안은 표준오차. \* p < .10; \*\* p < .05; \*\*\* p < .01

민주시민교육의 함의 중 선거관심도와 주관적 정책 차별성 확보는 정치 효능감과 투표 효능감을 높이며(<표 3>의 분석결과), 정치 효능감과 투표 효능감의 상승은 투표참여를 높이기 때문이다(<표 4>의 분석결과).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관계들은 민주시민교육의 투표참여 제고로 요약될 수 있다.<sup>10)</sup>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이 선거관심

도와 정책적 차별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때, 민주시민교육은 그 의도한 효과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민주시민교육이 의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교육임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의 함의인 선거관심도 증대, 주관적 정책차별성 확보가 정치 및 투표 효능감 제고(提高)에 기여하며, 이러한 제고는 결과적으로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유의할 점은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이 단순한 지식전달에 머무를 경우 교육의 의도가 달성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이 정책적 쟁점을 중심으로 토론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민주시민교육은 유권자의 관심과 정책적 분별력을 증진시키며, 이의 결과로서 교육의 의도인 정치참여 확대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발견들은 민주시민교육에 대하여 몇몇 주의점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표 2>부터 <표 4>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수는 정당선호도, 연령, 주관적 선거평가이다. 이 중 정당선호도는 선거지식에 대한 영향력을 상쇄시킬 만큼 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변수이다. 따라서 정당선호도가 있는 유권자를 중심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들에 대한 교육강화는 자칫 민주시민교육의 또 다른 중요한 가치인 다양성(diversity)과 관용(tolerance)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선호하는

10) 통제변수의 경우 <표 2>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정당선호도가 있는 유권자일수록, 연령이 높은 유권자일수록 그리고 선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유권자일수록 투표에 참가할 가능성이 높다. <표 2>와 차이를 보이는 점은 소득 변수로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한국의 투표참여를 설명하는데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표 4>의 결과는 소득수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정당이 있는 유권자는 일반적으로 정치적 신념이 강한 유권자이며, 정치적 신념이 강한 유권자는 정치 효능감과 투표 참여도 높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은 효능감의 극대화과 더불어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잘러(Zaller 1992)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들은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치적 신념에 일치하는 지식 및 의견만을 습득·강화하고, 이에 반하는 지식 및 의견은 배척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은 기존의 신념을 강화시키는 역할만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들에 대한 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이 추구하는 다른 가치, 즉 다양성(diversity)과 관용(tolerance)이 배척될 가능성이 크다(최종덕 2007).

한편 본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발견된 또 다른 변수는 주관적 선거평가이다. 주관적 선거평가가 의미하는 바는 유권자가 이번 선거를 “네거티브 캠페인(비방선거전)”으로 평가할수록 유권자의 정치 효능감과 투표 효능감이 상실되고,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도 낮아진다는 것이다(Ansolabehere and Iyengar ibid.). 이러한 점은 부정적 선거광고가 긍정적 선거광고 보다 효과적인 후보자 전략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향후의 투표참여 제고 가능성에 어두운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각한 고려가 요구된다.

< 참고문헌 >

김재한, 2011, “투표율의 연령효과 및 도농효과”, 『대한정치학회보』, 18집 3호 pp. 183-206.

김형준, 2008, “한국 선거의 투표율 하락 추이와 원인 고찰”, 『21세기정치학회보』, 제18집 1호 pp. 93-122.

엄기홍, 2009, “합리적 선택이론과 투표행태: 경제학적 관점”, 전용주·임성학·이동윤·한정택·엄기홍, 2009, 『투표행태의 이해』, 서울: 한울아카데미, pp. 100-127.

이규영, 2005, “독일의 정치교육과 민주시민교육”, 『국제지역연구』, 제9권 제3호 pp. 157-186.

전용주·임성학·이동윤·한정택·엄기홍, 2009, 『투표행태의 이해』, 서울: 한울아카데미.

조성대, 2009, “투표 참여와 기권”, 전용주·임성학·이동윤·한정택·엄기홍, 2009, 『투표행태의 이해』, 서울: 한울아카데미, pp. 222-256.

조진만, 2010, “민주시민 의식과 투표참여: 정치교육에 대한 함의”, 『한국시민윤리학회보』, 제23집 1호 pp. 85-104.

\_\_\_\_\_, 2009, “민주시민의식과 선거운동간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분석”, 『인문사회과학연구』, 제25집 pp. 158-185.

\_\_\_\_\_, 2006, “한국 재·보궐선거의 결정요인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40집 2호 pp. 75-100.

진영재·조진만, 2002, “한국 재·보궐선거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틀 제시와 사례 분석: 김영삼과 김대중 정권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pp. 185-202.

최장집, 200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서울: 후마니타스.

최종덕, 2007, “미국의 민주시민교육”,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제12권 1호 pp. 1-30.

Abramson, Paul R., John H. Aldrich and David W. Rohde, 2007, *Change and Continuity in the 2004 and 2006 Elections*,

Washington, D.C.: CQ Press.

Ansolabehere, Stephen and Shanto Iyengar, 1995, *Going Negative: How Political Advertisements Shrink and Polarize the Electorate*, New York: Free Press.

Bibby, John F., 1996, *Politics, Parties, and Elections in America*, Chicago: Nelson-Hall.

Buchanan, James and Gordon Tullock, 1962, *The Calculus of Consent Logical Foundations of Constitutional Democracy*, Ann Arbor: Michigan University Press.

Campbell, Angus, 1960, “Surge and Decline: A Study of Electoral Change,” *Public Opinion Quarterly*, Vol. 24, pp. 397-418.

\_\_\_\_\_, 1987, “The Revised Theory of Surge and Declin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1, pp. 965-979.

\_\_\_\_\_, 1993, *The Presidential Pulse of Congressional Elections*, Lexington: University of Kentucky Press.

Cover, Albert D., 1985, “Surge and Decline in Congressional Election,” *Western Political Quarterly*, Vol. 38, pp. 606-619.

Ferejohn, John A. and Morris P. Fiorina, 1974, “The Paradox of Not Voting: A Decision Theoretic Analysi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68, pp. 525-536.

Gerber, Alan S. and Donald P. Green, 2000, “The Effects of Canvassing, Telephone Calls, and Direct Mail on Voter Turnout: A Field Experimen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4, No. 3, pp. 653-666.

King, Gary, Robert D. Keohane and Sidney Verba, 1994, *Designing Social Inquiry: Scientific Inference in Qualitative Research*,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Morton, Rebecca B., 2006, *Analyzing Elections*, New York: W.W. Norton & Company.

- Putnam, Robert D., 2000. *Bowling Alone*, New York: A Touchstone Book.
- Riker, William H. and Peter C. Ordeshook, 1968, "A Theory of the Calculus of Vot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68, pp. 525-536.
- Verba, Sydney and Norman H. Nie, 1972, *Participation in Americ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Verba, Sydney, Kay Lehman Schlozman and Henry E. Brady 1995, *Voice and Equality: Civic Voluntarism in American Politic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Civic Education and Voter Turnout: Empirical Analyses of the 17<sup>th</sup> Presidential Election of Korea

Eom, Ki-ho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whether or not the intended consequences of civic education are embodied. In detail, it attempts to find out whether civic education affects the level of electoral concerns, electoral knowledge, and subjective policy differentiation, thereby increasing the possibility of voter turnout. Utilizing survey data on the 17<sup>th</sup> presidential election of Korea, it finds out that civic education works, rather in opposite to the existent literature.

However, the significance of civic education differs whether one analyzes electoral concerns, policy differentiation or political knowledge. This study concludes, therefore, that although civic education has an influence on voter turnout, its impact will be different in regards to how civic education is taught.

**Keywords** : Civic Education, Political Effectiveness, Political Efficacy, Turnout